▶▶ 매일 INDEX

3면
문 대통령 "KF-21, 공군의 중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음 3월 1일) 제275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9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내 시장·군수와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방역, 도정 최우선과제"

시장·군수 코로나19 대응 긴급 대책회의

송하진 도지사 "시·군 동참 전 행정력 동원" 강조

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내달 2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9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내 시장·군수와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는 다른 현안보다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단체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6주간 도내 환자의 88%가 집중 발생한 4개 지역인 전주시장, 군산시장, 익산시장, 완주군수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시·군은 영상회의로 참석해 진행됐다.

4개 시·군 단체장은 최근 지역 환자발생 현황과 추이, 주요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최근 들어 1일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이어져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며 "시·군에서도 다른 현안도 중요하겠지만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 저변에 있을지 모르는 숨은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임시선별검사소 10개소 확대 설치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하자"며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내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과 후 외부강사 5,000명과 학원·교습소 종사자 7,800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전수검사와 학원·교습소 3,500개소에 대한 시군·교육청 특별합동점검을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어 "예방접종센터 내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이동지원계획을 마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점검 공무원부터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세세하게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11일 종료되는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전주시와 완주군(이서면)은 적용 기한인 15일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하고, 이후 거리두기 조정은 환자 발생 추이 등을 지켜보며 상호 긴밀히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단계 격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월부터 확진자가 300~400명 대를 유지하다가, 4월 들어 500~600명 대로 지속 발생해 4차 유행 진입이 우려되고, 단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통상보다 길게 3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간 단계적으로 완화한 2단계 조치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 그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추진하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 중점위험시설은 다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강화한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등 방역을 강화한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 "영농바우처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전북도가 코로나19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대상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업종이다.

신청 접수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에서는 1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 현장 접수는 14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신청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유호상 기자

"리모트워커, 전북 유치"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시간·장소 제약없이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어

"일·휴식 공존 최적지로 리브랜딩을"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리모트워크시대 도래와 전북유치전략'이라는 이슈브리핑을 지난 9일 발간하고,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리모트워커'를 전북으로 유치하자고 주장했다.

리모트워크(Remote Work)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원격근무를 의미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업무방식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업무 생산성, 노동력 감소, 일과 삶의 균형, 환경문제 해결 등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법을 만들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리모트워크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경영자총협회(2020)에 따르면, 국내 매출 100대 기업 중 88.4%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등 지난해 이후 리모트워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리모트워커의 전북 유치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업의 지역이전 효과 및 창조적 인력의 전북 이주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인 김동영 박사는 리모트워커 전북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기업 원격사무소 전북지사 유치, 워케이션(workation) 시범지역 지정, 리모트워커 투어패스제작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본사의 일부기능과 인력을 전북으로 이전하는 원격사무소 유치를 위해 '원격사무소 전북지사 기업유치팀' 신설, 보조금 지급, 빈집 활용 숙박 및 사무공간 조성 지원, 육아 연계형 공유 오피스 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휴양시설에 공동 오피스 조성 및 랩(Lab) 설치를 지원,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워케이션 시범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이다.

셋째로는, 리모트워커 투어패스를 현재의 투어패스에 추가하고, 전북리모트워크 포털을 만들어 전북 공유오피스 맵 제작과 전북 리모트워커 팸투어는 물론, 주변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다.

김동영 박사는 "전세계의 리모트워커가 전북을 선택한다는 것은 원격근무를 위한 ICT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식과 레저활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리모트워커 전북유치전략은 전북도를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미래의 일하는 방식의 선도적 지역으로 리브랜딩하는 작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